

## 1. 19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

### 가. 추진실적

- ① **(추진체계)**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「'19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」을 마련('19.10.)하고 추진체계 확립 및 제도정착·확산 추진
  - (제도구축) ①전담관 지정 및 지원위원회 구성 ②인센티브 마련 및 우수사례 선정·포상 ③적극행정 면책·사전컨설팅 등 추진체계 마련
  - (확산·소통) ①전 직원 교육·기관장-직원 간담회 ②장·차관 기고·현장 간담회 ③옴부즈만·현장소통반을 통한 소통·공감 노력 ④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노력
- ② **(정책혁신)** 금융위 특성에 맞게 “금융혁신을 위한 적극행정”을 목표로 다양한 실행과제를 마련하여 국민의 공감대 확보
  - ① 기존규제정비위를 통해 행정규칙 일괄정비(773건 심의·132건 개선)
  -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
  - ③ 아울러, 지난해 말 현안조정회의('19.12.19.)에서 5개 분야(감독, 규제, 인가, 관행, 소비자)를 중심으로 ‘금융위원회 적극행정 강화방안’을 발표

### 나. 평가

- 금융위 특성·핵심기능과 연계하여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수립·시행한 점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
- 다만, 작은 조직의 특성상 인센티브 (특별승진, 성과급 등)가 부족하고, 지원 제도(사전컨설팅, 지원위) 활용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



## 2. 추진계획

※ 세부 방안은 '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지침'(3월, 인사처)에 따라 '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'으로 3월말 경 마련 예정

### 가. 추진체계 강화

- ① (인센티브 강화)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고, 직원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금융위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

<인센티브 강화방안(안)>

	2019년	2020년(안)
선발 방식	우수사례 선별·취합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선발(하반기)	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, 산하기관·국민 추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공무원 선발(상·하반기)
인센티브	인사평점 가점(0.1점) 부여, 포상금 지급	성과급S등급 부여, 희망부서 전보, 장기휴가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

- ② (사전컨설팅 활성화)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적극 활용

- 금융공공기관 정책과제 추진에서의 금융위·감사원 감사 부담 감면

\* (예) 혁신금융 지원(면책제도 개편 부문) 관련 산은은 여신심사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 배제사유를 객관화하는 조항을 면책 규정상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 신청

- ③ (지원위 역할 강화) 적극행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또는 사전컨설팅·면책 과제 심의 등 적극적 역할 부여

- ④ (공공기관 협업 강화) 금융공공기관\*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 등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자체 적극행정 과제 발굴\*\* 및 협업 확대

\* 금융감독원, 예금보험공사, 한국자산관리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신용보증기금, 한국산업은행, 서민금융진흥원, 중소기업은행, 한국예탁결제원(9개)

\*\* 공공기관 경영평가(기재부)에 적극행정 추진 관련 사항 포함('19~)

## 나. 금융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 추진

◆ 지난해 마련한 5대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

- 1 (감독) 현장과 소통하며 혁신적 시도를 응원하는 감독행정 구현
  - ① 비조치의견서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청제도, 선제적 발급제도 도입
  - ② 여신업무 뿐 아니라 모험자본투자,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면책 대상을 확대하고 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 면책제도 개편
- 2 (규제)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
  -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이상 지정(~'20.3.) 및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연결되도록 동태적 규제혁신 추진
  - ② 금융분야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, 금융공공기관 기업정보 등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마련 등 데이터 활용 확대
- 3 (인가·경쟁) 새로운 도전자에게 진입문턱을 완화하고, 경쟁 촉진
  - ① 인·허가 요건 정비 등 새로운 혁신도전자의 진입 유도
  - ② 기존규제정비위를 통해 법령(77개·2080개 규제) 일괄 정비
- 4 (관행) 부동산담보 위주의 안정적 영업을 선호하는 관행 개선
  - ① 동산 및 지식재산(IP)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회수지원기구 설치, IP담보대출 표준기준 마련, IP펀드 조성 등 인프라 구축
  - ② 기술력, 미래성장성으로 대출·보증이 가능하도록 기업평가방식 전면 혁신
- 5 (소비자) 소비자·국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정책 수행
  - ① 일반국민이 앱(어카운트인포)을 통해 모든 휴면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축
  - ② 채무조정요청권 도입, 연체채무부담 한정 등 채무자 중심의 채무 조정 인프라 마련(소비자 신용법 제정)